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독일 · 프랑스 ·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과 시사점

황미혜 · 권영은 · 김상수\*  
(동명대)

1. 서론
2.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정책
3. 프랑스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정책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4.1.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 4.2.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 4.3.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현황과 시사점
5. 결론

## 국문초록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직면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독일은 숙련 외국인력의 유입과 난민의 노동시장 참

\* 제1저자: 황미혜, 공동저자: 권영은, 교신저자: 김상수

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외국인력의 언어 및 문화 적응을 강화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구조에 기인하며, 한국은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수립에 있어 장기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숙련 외국인력 유치 강화, 문화적 통합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유입 전략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을 강조한다.

**|주제에** 인구구조 변화, 독일 외국인력 정책, 프랑스 외국인력 정책, 노동시장 변화, 한국 외국인력 정책

## 1. 서론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외국인력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각기 다른 역사적·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숙련 외국인력 유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두 국가의 정책적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유럽 전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하여 EU 내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약 3% 감소하였으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이 문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국가로 분석된다(EUROSTAT, 2024).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과 성장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력을 받아들였으며, 유럽연합은 이주, 망명,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해 우수한 전문 인력 유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단순 노동력 위주의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이다. 이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통합, 언어 능력 향상,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외국인력 정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표 1〉 유럽 주요국가 이주자의 규모(2023)

국가명	내국인 수	유럽 내 비율	외국인 수	대표 출신국가	비율
독일	8,470만 명	19%	1,144만 명	튀르키예	12.8%
프랑스	6,790만 명	15%	3,200만 명	마그레브	9.7%
이탈리아	5,900만 명	13%	2,200만 명	알바니아	4.3%
스페인	4,740만 명	11%	2,891만 명	에콰도르	7.8%
폴란드	3,770만 명	8%	700만 명	독일	2.3%

출처: OECD(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본 연구자 재구성

앞의 〈표 1〉은 유럽의 주요 국가 이주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2023년 1,144만 명의 이주자가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동년도에 326만 명의 이주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 가운데 독일 다음으로 이주자가 많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주자의 체류는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구구조 변화를 급속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적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사회적 발전 과정을 거친 국가로 볼 수 있다(김현정, 2021).

한편, 한국 통계청(2024)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온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최근 외국인력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정책

독일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195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청(Gastarbeiter)노동자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숙련 외국인력 유입과 난민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숙련 노동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이민법을 개정하고, 특정 산업(간병, 요식업, IT 등)에서의 외국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The Federal Government, 2023).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력의 언어 교육과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융합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EU 블루카드 제도<sup>1)</sup>를 활용하여 숙련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기업과 협력하여 외국인력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회카드(Chancenkarte)제도<sup>2)</sup>를 도입하여 비EU권 숙련 외국인력들이 일정한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독일에서 구직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신청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쳤거

- 1) 유럽연합(EU)이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제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EU 내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루카드를 가진 EU 역내 외국인 취업자는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카드를 발급받은 지 18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5).
- 2) 기회카드는 해외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최소 2년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자 또는 대학졸업자가 구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주한독일대사관, 2024).

나 대학 졸업자여야 하며, 언어 능력,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한 포인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평가받는다(외교부, 2024).

독일의 출산율 변화와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독일의 출산율은 2021년 여성 1인당 1.57명에서 2023년 1.3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목되며, 이는 연방인구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BiB)와 스톡홀름 대학교가 2024년 1월 22일 유럽 인구 저널(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The Federal Government, 2023; Veronika Bräse, 2024).

2024년 란셋(The Lancet) 저널에서는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국가의 75% 이상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와 경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임을 시사한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2022년 1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4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2년 여름에는 1.5명으로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2023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1월부터 11월까지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36명으로 하락하였다(The Lancet, 2024). 이는 과거 독일의 출산율 감소 속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감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과 고용 불안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Martin Bujard(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요인은 출산 의지 감소 및 출산 행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2008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불황과 출산율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시사한다. 따라서 독일의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점차 직장 생활에서 은퇴 생활로 옮겨가고 있으며, 차세대가 숫자로 메울 수 없는 노동 시장의 공백은 사회, 경제, 건강, 사회 시스템에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베를린 인구 개발 연구소는 25년 이상에 대한 미래 전망은 극도로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이는 결국 세계 각 지역의 경제, 사회 등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자명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BlfBE, 2024).

독일은 난민신청자의 노동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독일 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여하는 등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이민·난민·사회통합 담당 연방정부 커미셔너가 연방정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는데, 동 방안은 OECD(2021)에 따라 이민 이전, 독일 도착, 편입(incorporation), 동반성장, 결합(cohesion)의 5단계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이은채, 2022). 사회문화 적응은 사회적 기술과 문화학습 습득의 바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요소들로 는 거주 기간, 문화 지식, 주요 거주 국가에서 상호 작용, 문화적 거리, 언어 유창함, 문화 적응 전략 등이 포함된다(Ward & Kennedy, 1999). 유럽 선진국에서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며,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왔다. 독일은 이탈리아와의 양국 간 노동협정(1955)을 시작으로, 그리스(1960), 스페인(1960), 튀르키예(1961), 모로코, 포르투갈(1964), 튀니지, 유고슬라비아(1968)와 각각 노동협정을 맺으면서 손님노동자 제도를 운영하였다. OECD국가 가운데 독일은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거의 13%가 실제 국외에서 태어났으며, 국외 출신 비율은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독일은 자체적으로 주요 외국인력 유입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서,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극적인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지속적인 저출산율로 인해 노동력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은 간병인, 호텔, 요식업 분야와 같은 특정 산업에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프랑스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정책

프랑스는 식민지 배경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다수 받아들였으며,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문화적 적응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구증가 정책을 선택하였으며, 외국인력이 이주하기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외국인력의 유입현상은 지속되었다. 특히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알제리로부터 많은 외국인력들이 이주해왔다(Bertelsmann Stiftung, 2022).

프랑스 정부는 공화당 통합 계약서(CIR: Contrat d'intégration républicaine 이하 CIR)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프랑스어 능력 향상과 문화 적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난민 및 노동 이민정책을 병행하고 있다(Ministère de l'Intérieur, 2023). 프랑스는 또한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중시하며, 이민자의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AGIR(the Global Alliance for Resilience Initiative 이하 AGIR)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과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프랑스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중시하며, 이민자의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 및 체류 허용을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력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진리, 2024). 프랑스는 특히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교육을 필수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요식업, 간병 서비스 등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동 이민 개혁법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Stratégie humanitaire de la France, 2023~2027).

한편,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과 사회통합 전략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OECD, 2024). 특히 과거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국가에 속하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출신 외국인력이 주요 구성원이다. 이와 같이 2021년 프랑스로 가장 많이 유입된 외국인력은 모로코(+4,700명), 알제리, 튀니지 출신이었으며, 반면 이탈리아 출신 외국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감소세(-1,900명)를 보였다. 202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신청자는 6,600명 증가한 반면, 코모로(프랑스어: Union des Comores) 출신은 1,1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민자의 유입 유형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력 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정하고 있다. 2022년 2월 14일, 프랑스 내무부는 프랑스 내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행정국(ANEF: Administration Numérique pour les Étrangers en France 이하 ANEF)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외국인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여행 서류, 국제 보호 수혜 자격, 계절 근로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가족 재결합으로 인한 거주 허가 및 적격자 거주 허가 범위를 2023년 3월부터 추가 확대하였다. 프랑스는 난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이 단순한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ôle Démarches, 2024). 또한 2022년 7월 13일,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AGIR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주택, 공공 서비스 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수도권 내 27개 부서에서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25개 부서가 추가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OECD, 2023). 이러한 사회통합 정책에 따라 CIR 역시 2022년에 개정되었다. 그래서 2022년 5월 4일부터 CIR에 서명하고 다년간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서약에 동의해야 하며, 어학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럽인어공통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 A1 레벨 이상을 요구했으나, 2022년부터는 A1 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프랑스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A1 또는 A2 레벨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B1 수

준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Ministère de l'Intérieur, 2023). 이처럼 프랑스는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단계별 어학 교육을 주요 이민자 구성원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23년 2월 1일 프랑스 정부는 이민정책과 법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은 이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서류미비 외국인력을 위한 합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인물에 대한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장기 체류 허가 요건으로 최소 수준의 프랑스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이민자의 언어 습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거주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행정 구금 대상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OECD, 2023).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학습 의무화와 CIR 계약은 외국인력이 프랑스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여성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이민자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효과적인 통합을 공공정책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다섯 가지 우선 시행 영역을 정의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은 고용을 통한 통합, 외국인 여성 지원 강화, 시민 사회 참여, 통합 영역의 역량 심화, 지방 당국과 공공 서비스 및 운영자의 조치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은 순환 정책으로 이민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민을 보다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Pole Démarches, 2024). 또한 2022년 5월 4일부터 장기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서약에 서명해야 한다. 이 개정안 이전에는 프랑스어 테스트를 통해 개인이 CEFR의 A1 레벨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로 결정되었다(Ministère de l'Intérieur, 2023).

2023년 2월 1일, 프랑스 정부는 통합을 개선하면서 이민 통제라는 제목의 법안을 제출하는 이중적인 제도로 외국인력 정책을 접근하였다.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이민 소송을 간소화하고,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합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방은 강화하였으며, 최소 수준의 프랑스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거주 허가, 필수 지문채취 허용, 거주 갱신요건 강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행정 구금 금지의 법안이 2023년 2월 상원에 제출되었다(OECD, 2023). 이처럼 프랑스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전체 이민자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성이다.

반면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와의 연계성 등 외국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프랑스는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력을 받아들인 국가이고 외국인력에 대한 프랑스어 정책은 의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외국인력에 대한 언어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여전히 자율적인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독일과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적 외국인력 정책 수립으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외국인력 유입 및 통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숙련 노동자 유치 강화가 요구되며, 독일처럼 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적극 장려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외국인력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사회통합 지원 강화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프랑스의 사례처럼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 운영의 확대와 나아가 외국인력 구성원에 따라 의무, 자율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

#### 4.1.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정책의 역사적 배경이다. 독일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력 초청(Gastarbeiter) 정책을 시행했다. 1955년 이탈리아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터키, 스페인, 그리스 등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약 1,400만 명의 외국인력이 독일로 유입되었다(Brücker et al., 2019). 그러나 이 정책은 단기 순환형 이주 노동을 전제로 하였으며, 체류 기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귀환하는 구조였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독일은 외국인력 유입을 중단하였으며, 1983년에는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존 외국인력의 본국 귀환을 장려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다시 외국인력 유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최근 독일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이다. 2005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노동 체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의 구직을 위한 별도 체류 허가를 도입하고,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을 완화하였다(Brücker et al., 2020). 이후 2012년 숙련 외국인력 인정법, 2015년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 2019년 전문인력 이민법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 확대하였다. 2023년 개정된 전문인력 이민법에서는 독일 체류 중 취득한 학위 및 자격증을 인정하고, 급여 기준을 낮추는 등 외국인력의 거주 허가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IT, 엔지니어링, 보건의료 등 특정 산업군에서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 장려하고, 계절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23). 2024년 2월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독일 국적 취득 요건을 기존 8년에서 5년(특

정 조건 충족 시 3년)으로 단축하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였다. 또한 인도, 브라질 등과의 이민 협정을 체결하여 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방 내무부 산하에 연방이민협약 특별대표를 신설하여 외국인력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OECD, 2024).

셋째, 외국인력 정책의 효과와 평가이다. 독일경제연구소(IW, 2023)에 따르면, 이민 확대는 독일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IT 및 기술 혁신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체 이민자 중 25~34세의 숙련 외국인력 비율이 25%에 불과하여, 숙련 외국인력 유치 확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 국민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3년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이민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답변하였다(GESIS, 2023). 2016년 개정된 이민 및 난민법(Asylgesetz)은 이주민의 언어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독일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거주법을 제정하여 5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특정 요건 충족 시 18개월 동안 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ETIAS, 2024). 이와 같은 독일정부의 법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극우 정당의 반이민 정서 확산과 불법체류 문제는 독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 4.2.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프랑스는 2021년 약 308,000명의 외국인력을 유치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단기 계약을 통해 프랑스에 입국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 고용을 통한 통합: 외국인력의 직업 교육과 취업 기회 확대
- 2) 외국인 여성 지원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여성 보호
- 3) 시민사회 참여 촉진: 외국인의 지역 사회 활동 장려
- 4) 통합 역량 강화: 교육 및 법적 지원 확대
- 5) 지방정부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역별 외국인정책 조율

또한 프랑스는 난민 수용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할당 계획을 통해 망명 신청자 수용 및 난민 통합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민 통제 및 사회통합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은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합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인물에 대한 추방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 허가를 위해 최소한의 프랑스어 능력을 요구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는 전체 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와 연계에서 이어지는 갈등 등 지속적인 과제가 남아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4.3.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현황과 시사점

2024년 말 현재 기준, 한국의 체류 외국인인 총 2,650,783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이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인 2,042,017명, 단기 체류 외국인인 608,766명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2024). 또한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인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강화된 체류 관리를 통해 이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창원 외, 2023).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정책명	내용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여 외국인력 수급을 체계적 관리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 부처 간 외국인 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법정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부처 간 상이한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임

정책명	내용
국내 유학 인재 비자 연계 트랙 구축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유학에서 구직, 취업, 거주로 이어지는 비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확대	2025년에는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여 13만 명을 도입할 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농업 등 계절적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우수한 외국 인재의 영주권 및 귀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022)에서 본 연구자 재구성

앞의 <표 2>에 나타나듯이 한국은 외국인력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노동력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체류 외국인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E-7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E-7 비자는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 분야별 숙련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E-7 비자의 신청 절차는 초청 기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학위증,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이 포함된다(비자포털, 2025). 또한 임금 요건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월 약 285만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경우 70% 이상(월 약 265만 원)으로 완화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의 경우, 연간 2,500명을 선발하며, 고득점자(200명),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50명), 관련 부처 추천자(2,150명)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특정 산업의 숙련 외국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 사례에서 살펴봐왔듯이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통계청(2023)은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의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단순한 노동력 보충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경제 성장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단순한 노동력 보충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경제 성장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국으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OECD, 2024).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 사례 중에서 언어 참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현재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매우 다른 역사적 이민 경험, 언어적 구성, 문화적 및 정치적 구조로 인해 국가 간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력 정책에서 언어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두 국가의 언어 정책 또한 차별화된 비교가 필요하며, 포용과 통합이라는 각각 범주의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Angelika Redder, 2024). 독일과 프랑스의 외국인력 정책을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독일, 프랑스,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비교

항목	독일	프랑스	한국
주요 정책 목표	숙련 외국인력 유치, 난민 통합, 노동시장 활성화	난민 통합, 이민자 언어 및 문화 적응 강화	저숙련 및 고숙련 외국인력 유입, 산업별 수요 충족
비자 제도	EU 블루카드, 기회 카드	공화당 통합 계약서(CIR), 난민 및 가족 재결합 비자	고용허가제(E-9) 전문인력 비자(E-7)
숙련 노동자 정책	포인트 시스템 도입, 숙련도 요건 완화	언어 및 직업 교육 강화 (France Stratégie, 2022)	기술직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체류 및 취업 지원
난민 통합 정책	언어 교육 및 고용 연계, 난민 프로그램	난민 지역 할당 정책 및 AGIR 프로그램	제한적 난민 수용 및 통합
산업별 전략	간병, 요식업 등 특정 산업 외국인 채용 협약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정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중심의 저숙련 노동자 유입

항목	독일	프랑스	한국
문화 및 언어 지원	언어 및 문화 교육 지원	프랑스어 학습 의무화, 언어 능력 단계 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운영
사회적 문제 대응	이민자 통합 부족과 난민 정책 갈등	이민자 통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외국인 차별과 노동시장 내 갈등 문제

출처: 앞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적 외국인력 정책 수립이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단기적인 노동력 보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외국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통합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숙련 외국인력 유치 강화이다. 독일처럼 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을 적극 장려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T 및 첨단산업 분야의 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기회 카드 제도(Opportunity Card)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다각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통합 지원 강화의 지속성이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처럼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 융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별 맞춤형 정책 확대이다. 특정 산업(제조업, 요식업, 간병 등)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처럼 외국인력의 직업훈련을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프랑스처럼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력 채용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외국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방

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개선이다. 한국은 외국인력의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법적 지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 및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가족 동반 외국인력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의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성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는 숙련 외국인력 유입 확대, 사회통합 강화, 법적 지위 개선 등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이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국인력 유입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노동시장과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외국인력 정책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독일과 프랑스는 외국인력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통합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력 유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통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독일은 숙련 외국인력 유치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프랑스는 난민과 여성 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국가의 외국인력 정책에서 주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언어정책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넘어, 이민자의 사회적 통

합과 장기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외국인력 정책과 사회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E-9, E-7 비자 제도를 강화하여 산업별 맞춤형 외국인력 유입 방안을 확대하고, 이민자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의 정책을 한국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독일과 프랑스의 이민 역사와 사회적 맥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 모방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정책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력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력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명원(2023).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11, 1-8쪽.  
강명원(2023). 프랑스 이민법제의 역사적 발전과 사회통합정책과의 관계, 이민정책 연구원 정책보고서 시리즈, 2, 1-59쪽.  
고용노동부(2022).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1-27쪽.  
고용허가제(2023).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 (검색일:2024. 12.20).

- 김진리(2024). 프랑스 이민 개혁 정책과 그 내용, 국제사회보장리뷰, 28, 123-127쪽.
- 김현정(2021).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민족연구, 78호.
- 권영은(2024). 글로벌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정책 인식 분석, 동아대 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획재정부(2025). EU 블루카드 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 (검색일: 2024.12.30).
- 계봉오·김영미(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독일경제연구소(2023). IW(Institute für Wirtschaft Köln <https://www.iwkoeln.de/en>) (검색일:2024.12.04).
- 대한민국 비자포털(2025). <https://www.visa.go.kr>
- 법무부(202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 외국인정책 현황, <https://www.moj.go.kr/moj/2412> (검색일: 2024.12.30).
- 이은채(2022).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방안연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40(3).
- 이창원·조하여(2023). 국내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 규모 동향, 이민정책연구원, 08, 1-11쪽.
- 이향수·이성훈(2017). 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95-100쪽.
- 외교부(2024). 독일 경제 주간 동향(2024.10.21.~25.), 국제경제동향, 주독일대사관, <down.mofa.go.kr> (검색일: 2025.03.20).
- 주한독일대사관(2024). <https://seoul.diplo.de/kr-ko> (검색일: 2025.03.10).
- 최서리(2024). 주요국의 이민정책 전환 사례와 시사점, 미래성장연구, 10권(1).
- 통계청(2024). 2024년 한국의 사회지표 저출생 통계지표, <https://kostat.go.kr/board.es> (검색일: 2024.12.04).
- Angelika Redder(2024). Sprachliche Teilhabe Migrierter, Waxmann Verlag GmbH, 1-174쪽.
- Bertelsmann Stiftung(2022). 독일 이민 및 통합 정책.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 (검색일: 2025.01.30).
- BifBE(2025). “Demografischer Wandel: Demografische Veränderungen gestalten”, berlin-institut <https://www.berlin-institut.org> (검색일: 2025.01.09).
- BMAS(2024). 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독일 노동 및 사회 정책 자료. <https://www.bamf.de/DE/Startseite>. (검색일: 2025.02.04).
- BR24(2024). “Jetzt für die Kommentarspalten bei BR24 registrieren”, <https://www.br.de/nachrichten> (검색일: 2024.01.27).
- Brücker, H., Hauptmann, A., & Vallizadeh, E.(2019). The Labor Market

- Integration of Refugees in Germany.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Brücker, H., Rother, N., & Schupp, J.(2020). Migration and Integration in Germany.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 Bujard, MartinZeit, Geld(2012). Infrastruktur - Zur Zukunft Der Familienpolitik Soziale Welt - Sonderband 19.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2023). Migration and Integration Report 2023.
- Chang, Howard F(2001). "Liberal Ideals and Political Feasibility: Guest-Worker Programs as Second-Best Policies", NCJ Int'l L. & Com. Reg. 27.
- Citation, W., & Kennedy, A.(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쪽.
- ETIAS(2024). <https://etias-visa.kr/etia> European Travel Authorization System (검색일: 2024.12.07).
- EUROSTAT(2024). "Euro area unemployment at 6.4%", Euroindicators, <https://ec.europa.eu/> (검색일: 2025.02.04).
- France Stratégie(2023). 프랑스 노동 정책 보고서, <https://www.strategie.gouv.fr>.
- GESIS(2023). "Current Questions on Migration / Integration", GESIS, [https://search.gesis.org/research\\_data](https://search.gesis.org/research_data).
- Martin Bujard(2015). "Consequences of Enduring Low Fertility - A German Case StudyDemographic Projections and Implications for Different Policy Fields",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0(2) 131-164쪽.
- Ministère de l'Intérieur (2023). 프랑스 이민정책 보고서. <https://www.interieur.gouv.fr>
- OECD(2024).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4, <https://www.oecd-ilibrary.org/sites> (검색일: 2024.01.23).
- OECD(2024). Germany's Immigration Policies: Trends and Challenges (검색일: 2024.02.03).
- Pole Démarches(2024). "Comment la circulaire Retailleau modifie-t-elle la politique d'immigration ?", Pole Démarches, <https://poledemarches.fr>. (검색일: 2024.12.01).
- Stratégie humanitaire de la France(2023-2027), <https://www.diplomatie.gouv.fr> (검색일: 2025.01.25).
- The Federal Government(2023), 개정 전문인력 이민법, <https://kor.make-it-in-germany.com> (검색일:2025.01.04).
- The Lancet(2024). <https://www.thelancet.com> (검색일: 2024.12.01).
- T Vos, SS Lim, C Abbafati, KM Abbas, M Abbasi, M Abbasifard(2019).

Global burden of 369 diseases and injuries in 204 countries and territories, 1990–2019: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The lancet 396 (10258), 1204-1222쪽.

Veronika Bräse(2024). <https://www.br.de> (검색일: 2024.12.29).

### 필자 소개

성 명 황미혜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천로 428  
전자우편 tumhh@tu.ac.kr

성 명 권영은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천로 428  
전자우편 yekwon@tu.ac.kr

성 명 김상수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천로 428  
전자우편 kissoo@tu.ac.kr

## Abstract

# Foreign Workforce Policies and Implications of Germany, France, and South Korea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Hwang, Mi-hye · Kwon, Young-en · Kim, Sang-soo  
(Tongmyong University)

Major European countries are facing a decline in the labor force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prompting them to implement foreign workforce policies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Despite their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Germany and France have both pursued policies that encourage the influx of skilled workers and strengthen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foreign workforce policies of Germany and France to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findings indicate that Germany focuses on attracting skilled workers and promoting refuge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while France emphasizes language and cultural adaptation for immigrant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difference stems from each country's historical background and economic structure, necessitating a tailored foreign workforce policy for South Korea.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long-term immigration policy, strengthening skilled labor attraction, and supporting cultural integration. Specifically, it emphasizes the need for customized foreign workforce strategies aligned with South Korea's labor market demand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Key words]** Aging population, low birth rate, demographic change, German foreign workforce policy, French foreign workforce policy, labor market transformation, Korean foreign workforce policy

투고일 2025. 02. 23 / 심사일 2025. 03. 18. / 게재확정일 2025. 03. 25